

송전망 주변 주민에 햇빛소득… 입지 선정 투명성 높인다

기후부, 지자체 지원금 지역에 배분
복수 재생에너지 발전소 운영 허용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자료 전면 공개

앞으로 송전망 주변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아울러 송·변전 설비 입지 선정 초기 단계부터 주민 참여권이 대폭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2건,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2일부터 입법·행정에 고한다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해 온 지역 민원을 예방하고, 송전망 건설 주변 마을의 태양광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송전탑

/유투이미지

적 혜택과 소득 창출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뒀다.

◆주변 마을에 태양광 소득 지원… ‘계통햇빛소득마을’ 발굴

우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른 경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가공선로 1km당 20억 원) 중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도록 했다. 특

히 해당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설치 비용을 우선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 협동조합의 설립 단위도 기존 읍·면·동에서 실제 피해를 입는 리동 단위로 좁히고, 복수 재생에너지 발전소 운영도 허용해 주민 밀착형 수익 구조를 짰다. 여기에 기후부는 지방정부와 한전과 협

력에 주민 참여 의향과 부지·계통접속 등 사업 여건을 갖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시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후보 마을의 사업화 가능성과 예상 수익을 검토하고, 사업 구상과 참여 절차 안내 등을 지원해 제도개선이 실제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입지선정 ‘깜깜이’ 해소… 주민 참여 및 자료 공개 확대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입지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선위) 구성 전 시군구 단위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해 설명회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한다. 지역주민의 입선위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회의 후에는 의결사항과 함께 회의자료까지 개인 정보 등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아울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관련 입선위에 기후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입선위는 또 후보 입지를 선정할 때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을 도출해 비교·검토해야 하며, 주민이 서면으로 제안한 대안 경과지나 부지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입선위 안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둘 이상의 송·변전설비 사업이 동일 시군·구에 겹칠 경우 입선위를 통합·병행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철탑 공용 방안을 우선 검토하도록 해 환경 파괴와 토지 이용 효율 저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송전망 건설 주변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의 발전 수익을 함께 나누고, 사업 초기부터 입지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지방정부·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시업을 발굴하는 등 전력망이 지역과 상생하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현장 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워라벨+4.5’로 노동시간 줄이고 생산성 ↑

노사발전재단, 기업 사례 2건 발굴
기업 운영·서비스 품질 그대로 유지

노사발전재단이 ‘노동시간 단축’ 및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한 기업의 사례 2건을 발굴했다. 또 이 같은 노동시간 단축 부문 성공모델의 전국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워라벨+4.5 프로젝트’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사업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이 운영위는 지난 5월 발족했다.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지원을 도모한다.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한다. 올해 347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재단은 제3차 운영위를 개최한 자리에서 부산지역 2개 기업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산 사상구 소재 영창에코(제조업·31명)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에 신발 인솔(깔창)을 납품하는 기업이다. 성수기에 반복되는 장시간 노동 개선과 숙련인력 유지를 위해 워라벨+4.5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이 기업은 ‘일하는 방식 변화+제조 과정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뤄 냈다.

우선 전 직원 노동시간을 주 평균 2시간 줄였다(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유급 휴무일로 지정). 그 대신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 병목공정에 다기능공을 배치해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제품 생산계획·실행 시스템(ERP·MES)을 도입해 제조 과정을 혁신했다. 그 결과 생산성 향상(인솔(깔창) 1만 켤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8%(50시간→46시간) 단축하는 성과를 냈다.

부산 해운대구 소재 디아이앤씨(정보

통신업·58명)는 ‘업무 자동화+근로시간 관리 정비’로 효율성을 제고했다. 이 기업은 IT 인프라 유지보수 업체로, 업무 특성상 잦은 연장·휴일근로 탓에 핵심인력 유출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청년인재 확보를 위해 워라벨+4.5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 35시간제(매일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점심 휴게시간 15분 확대)를 도입했다.

이어 단축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고 자 자체 개발한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아울러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에 참여해 근로시간 관리와 채용제도도 정비했다. 업무 쏠림 방지를 위해 신규 인력도 3명 충원했다. 그 결과 노동시간 단축 후에도 유지보수 서비스는 종전대로 유지됐고, 월간 보고(중병)자료 작성 소요시간이 건당 8시간에서 2시간으로 대폭 감소했다.

운영위 참석 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이려는 과정에서 있었던 시행착오, 애로 등을 공유했다. 이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해진공 지원 ‘현대오일터미널’ 증설 준공

100억 금융 지원… 연료 저장 확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원한 ‘울산항 현대오일터미널 제1선석(배가 접안하는 전용공간) 증설사업’이 준공했다. 이는 석유·화학제품에 더해 친환경 액체연료까지 대량으로 보관·유통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 사업에는 총 2450억원이 투입됐는데 이 중 1100억원이 해진공의 금융 지원을 통해 조달됐다. 해진공이 액체화물터미널에 금융을 지원한 첫 번째 사례다.

액체화물터미널은 석유제품·화학물질·친환경 연료 등의 액체화물을 운반선에서 안전하게 내리고 보관·유통할 수 있도록 특수 파이프라인과 대형 저장 탱크를 갖춘 필수 항만 인프라다. 액체화물의 특성상 일반 부두와 달리 고도의 안전 관리와 전용 저장 시설이 필수다.

시설은 1년 8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완공됐다. 축구장 약 14개 면적에 달하는 10만 3,450제곱미터(㎡) 부지에 대형 액체 저장 탱크 43기를 갖췄다. 이번 증설로 현

대오일터미널은 29만톤(t)의 저장용량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로써 기존 운영 중인 제2선석을 포함해 총 78기의 저장탱크, 57만t 이상의 액체화물을 동시에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특히 기존의 석유화학 유류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세대 액체화물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는 바이오연료·메탄올 등의 저장도 가능하다. 이에, 급증하는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인병길 해진공 사장은 “이번 현대오일터미널 제1선석 준공은 해운·항만업계 전반에 탄소중립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 해진공의 금융 지원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한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내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금융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발리에 한국형 전기버스 11대 도입

기후부 ODA로 버스·충전기 보급

인도네시아의 세계적인 관광지 발리에 처음으로 한국형 녹색모빌리티가 상륙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바즈라 산디 기념관에서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및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시범사업’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발리 주 정부가 협력해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는 윤순구 주인도네시아 대사, 라흐마트 판부디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장관, 외안 코스터 발리 주지사 등 현지 주요 인사와 현대자동차·채비 등 국내 기업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사업은 기후부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추진됐다. 관광과 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발리 지역에 현대자동차의 전기버스 11대와 국내 충전기 전문기업 채비의 100kW급 급속충전기 6기를 도입해 인도네시아의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한다.

발리에 공공 전기버스가 공식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지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대중교통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전기버스는 현지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본격적인 운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우수 기업들의 친환경 모빌리티 기지재를 성공적으로 보급·실증함으로써, 국산 기술의 우수



인도네시아 발리에 보급된 현대자동차 전기버스. 11월 중 시범운행을 시작한다. /기후부

한 품질과 신뢰성을 국제무대에 각인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운행 과정에서 수집되는 배터리 전비, 충전 유형, 승객 수요 등의 실증 데이터는 향후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전역은 물론 동남아시아 시장 전반으로 친환경 교통 기술과 녹색산업 수출을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국내외 현장 실증·시장 진출 지원

한국전력(이하 한전) 등 6개 에너지 공공기관이 전남광주지역의 유망 에너지 스타트업을 발굴해 국내외 현장 실증과 시장 진출까지 지원한다.

한전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열린 ‘전남광주지역 동반성장 협의회’ 출범 협약식에 참여해 지역 에너지 스타트업 공동 육성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전남광주지역 동반성장 협의회는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지원을 연계해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상생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결성됐다.

한전은 이날 발표한 ‘전남광주 에너지 스타트업 공동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전남광주 지역 에너지 공공기관과 연구·지

원기관의 전문 역량을 결집해 유망 에너지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사업화부터 실증·시장진출까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소재하거나 특구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 10년 이내 에너지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다. 한전은 유망 스타트업 총 3개 기업을 선정해 약 3억 9000만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사업에는 한전을 비롯해, 한전KDN, 한전KPS,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에너지밸리리서스융합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한다. 각 참여기관은 고유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제품 상용화 및 사업 구조 고도화, 전문 인력 확보, 교육과 투자 연계, 국내외 현장 실증(PoC) 및 수출 현지화 등이다.

/세종=한용수 기자